목어

테러에 숨은 마음

누가 그랬던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맞는 말이다.

인간의 심층에 숨어 있는 심리적 근간도 두려우려니와 의식 수준에서의 공격성 또한 두려움의 극치다.

흔히 못된 사람을 지칭하여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란 말을 즐겨 쓴다. 요즈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나 전쟁의 위기를 생각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의 모순이 생각난다.

제발 짐승만큼의 분별만 있어도 세상은 참 온전하지 않을까 하는 역설적인 생각을 해본다. 짐승은 생각이 다르다지만 종교가 같지 않다고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만이 그런 행동을 한다.

개인 심리학에서 인간의 본능을 설명하면서 리비도와 데스트루도란 말을 쓴다. 성적 욕구와 공격적 욕구를 말하는데, 테러는 이런 공격적 욕구의 발로이리라. 이런 본능적 성욕과 공격욕구가 생산과 파괴를 주관하지만 조화를 이룬다면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조화를 깨면 파괴의 원인이 된다.

미국이 얼마 전에 당한 미증유의 테러사건으로 많은 인명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결과에 보복하여 공격적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조건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테러를 저지르는 원시 본능적 충동이나 이를 사회적 조건과 결합시켜 합리적인 공격성을 부추기는 것이나 심리적 근간은 같다.

어느 쪽이건 이 흥분할만한 사건을 두고 소용돌이치는 목표지향적인 공격적 활동은 멈추어야 한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미국사람들에게 악연을 누군가가 먼저 끊어야 한다고 충고한다면 들릴 이치는 없겠지만 힘을 가진 쪽에서 먼저 끊어야 악연이 끊긴다. 그 고리를 끊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이다. 짐승만한 질서라도 가져보자.

이근후(열린마음 크리닉 원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타워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개발보다 '문화·문화재 보호' 우선

이미경 의원 제안 '문화 환경 평가제' 핵심

'환경영향평가' 허점 보완 문화유적 사전조사 필수

◇10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미경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관련, 제안한 '문화환경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종교문화시설과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등에 대한 영향평가도 사전에 실시하자는 제도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항목은 모두 3개 분야 23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상 지형 및 지질 동·식물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연환경 분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및 진동 악취 경관 등 11개 항목의 생활환경 분야, 인구 주거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 7개 항목의 사회·경제환경 분야가 그것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제5조2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은 평가의 내실화와 간소화를 목적으로 사업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 또는 현황조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종교시설과 비지정 문화재 등 문화환경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문화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발로 인한 소음과 먼지, 진동, 지하수 고갈 등 사찰의 간접적인 환경피해와 함께 이에 따른 신앙활동의 피해 등도 평가항목에 포함돼 종교문화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폐사지, 가마터, 미발굴 매장문화재 등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평가항목도 추가돼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유적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보호대책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

특히 불교계의 경우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찰의 문화 환경을 훼손할 경우 초래되는 사찰수행환경의 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헌법상 종교신앙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경 의원은 이와 관련 "종교계와 문화예술계의 주장을 담은 문화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적 요인만을 강조, 종교문화 및 역사환경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시 전통사찰과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환경평가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2년간 실태조사 한번 안해" "보물급 성보 국고지원 전무"

'문화재 보수비' 국감서 논쟁

문화재보수비 국고보조금 사용이 올 정기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의 핵으로 떠올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서 12일 열린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문화재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준과 우선 순위, 예산 집행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의 문제를 꼬집었다. 고 의원은 "각 지자체가 신청한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은 2년 동안 실태조사 한 번 안 나갔다"며 "이런 식으로 문화재 보수 국고지원금을 지원한다면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1999년도의 경우 1천478억 원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됐으나 이 중 실태조사를 한 15%에서 모두 175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아예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고보조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2000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문화재 수리 공사 847건에 대한 문화재청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화장실이나 요사채 개축 등에 지급된 건수가 60건이 넘었다고 밝히고 "문화재 수리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의원은 문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상 개축 등에는 예산이 지원된 곳이 많은 반면, 김천 한천사 출토 금동자물쇠외 일괄(보물 1141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505호) 해체보수 등의 사업은 보물급 문화재인데도 전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역시 전남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13호) 등의 보수사업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화장실이나 요사채의 신·개축 등 주변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조계종 총무원은 1999년 5월과 6월에 각각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과 시행령 42조 제2항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과 함께 문화재 주변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의원들의 질책과 애정은 반드시 수용해야 겠지만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따른 오해는 불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계종 신도교육 10월로 연기

사찰·신도 부담 최소화 교육수준 어떻게 '고심'

조계종 포교원이 9월부터 전국 사찰들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신도기본교육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포교원은 추석이 지난 10월 중순쯤에야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처럼 신도기본교육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선 사찰들이 당초 포교원이 마련한 기본계획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포교원은 신도기본교육 계획 수립당시 3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던 것을 최장 1년 이내에 12시간만 이수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찰과 신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사찰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한 요인이다. 사찰간 신도수준 격차가 큰 데에다, 아직도 마땅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포교원으로서는 최대한 '균형 잡힌 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여론 수렴에 중요한 창구역할을 했던 교구 본말사주지연수가 지난 13일 끝난 것도 10월 중순으로 늦춰지게 된 이유다. 수렴된 여론을 각 사찰에 내려 보낼 교안이나 지침서에 반영하기에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포교원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이사장이 18일 한국을 방문했다. 동국대 초청으로 방한한 마에다 이사장은 학회 창립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내년 정기 학술대회(7월 6~7일 동국대)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20일에는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내년 동국대서 학술대회' 준비차 방한
日 인도학불교학회 마에다 이사장

"실천과 동떨어진 불교학은 무의미"

◆내년 학술대회는 학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다?

"내년은 마침 동국대가 학회 이사학교로 가맹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를 맞아 일본 불교의 조국인 한국에서 지금까지의 학회를 회고하고 새로운 전망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밖에서 보는 한국 불교학계에 대한 인상은?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과 만나 보면 한국 불교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산스크리트어 등에 대한 관심도 낮다. 자국 불교 연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와 스리랑카 등 외국의 불교에도 관심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 불교학계의 흐름은?

"단체간, 국가간 상호 교류 활성화다. 특히 IT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국제협력의 테두리를 넓혀 가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불교 祖國"
"불교, 21세기 사상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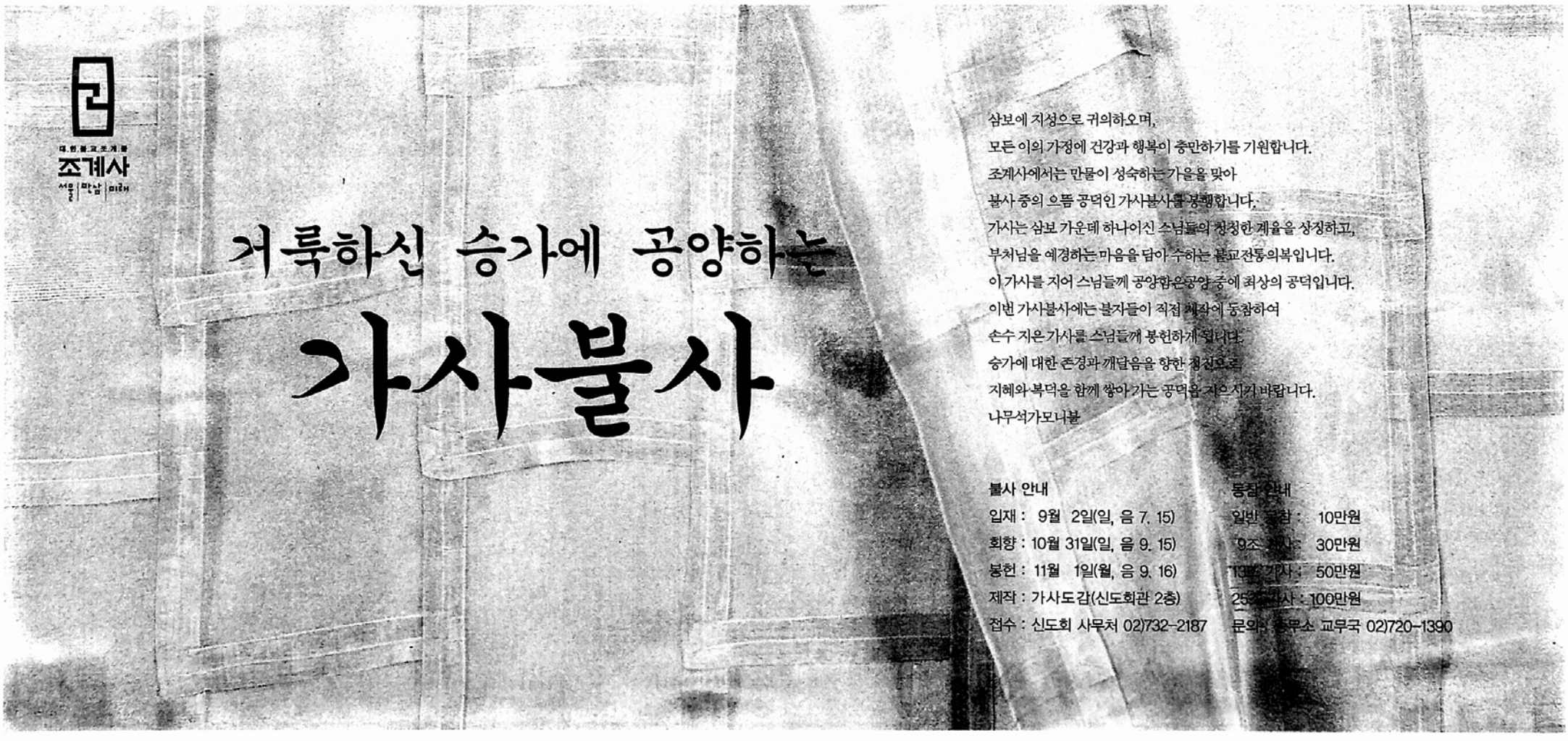
◆일본 불교학만이 지닌 강점이라면?

"문헌학적, 역사학적 연구에 있어 일본불교는 분명 우수하다. 그러나 불교의 본영역은 실천에 있으며 불교의 가르침을 삶으로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활성화 없는 불교학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서 불교가 21세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모든 사물의 평등성과 상호의존성을 말하는 불교는 21세기의 키워드인 '상생'의 사상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 한일 관계가 냉각 국면에 있다. 앞으로 한일 교류를 넓혀 나가기 위해 불교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은 불자라는 점에서 공통의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있다. 불교에는 국경이 없다. 먼저 한일의 불교도가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951년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과를 중심으로 창립한 일본 인도학불교학회는 한국, 대만, 중국, 미국, 영국, 독일, 인도,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 학자 25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세계적인 학술단체다. 권형진 기자